

금호타이어 ‘합평 축소 이전설’ 노조·지역사회 강력 반발

광산구의회 “반쪽짜리 이전 반대”...광주 1공장 임시 가동 요구
노조 “유럽 공장 신설 계획 철회·고용 보장” 주장 천막 농성 돌입
사측 “예전부터 논의하고 검토했던 계획안 아직 확정된 것 없어”

금호타이어의 유럽공장 신축 계획과 동시에 합평 공장 축소 이전설이 제기되면서 노조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원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2500여명의 노동자와 2만여 가족의 생계를 외면한 반쪽짜리 공장 이전을 추진하려는 금호타이어의 결정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국내 공장 축소·해외 공장 신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합평 빛그린산단 신공장에 1단계부터 최

소 연 600만본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구의회는 또 “2021년 단체 협약에서 합의한 연 1400만본 규모의 최종 완공 약속을 지키고 화재 피해가 없는 광주 1공장을 임시 가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호타이어는 실제 유럽 내 공장 신설을 위해 폴란드와 세르비아, 포르투갈 등을 대상으로 최적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 내 타이어 제조 공장 설립에는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 가동 초기 연간 600만본에서 공장 안정화 이후 1200만본 생산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지난 5월 광주공장 화재 발생을 명분으로, 국내 생산량을 대폭 축소하고 유럽 신규 공장으로 물량을 모두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공장 유지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폴란드 등 유럽에서는 현지 공장을 지을 경우 국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인건비, 우수한 산업 인프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광산구의회는 금호타이어측의 유럽 공장 설립을

직임과 관련해 “금호타이어는 광주에서 시작한 향토기업으로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외면하고 이익만을 쫓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방향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 아닌 지역을 떠나는 탈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고용 불안 등을 호소하며 유럽 신규 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자금 문제로 합평공장 이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유럽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합평과 1공장을 합쳐 연 950만본의 생산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광주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노동자 고용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측은 이에 대해 “유럽 공장 이전은 내년 관세부과를 앞두고 3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대형 화재로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내 공장 축소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노동자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5일부터 광주공장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보상 접수는 8300여건으로, 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인 피해 5371건을 우선 심사 중이다. 심사가 완료된 대인 피해 접수 중 보상이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우선 연락과 서면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 7년만에 최고치 기록

광주·전남 3개월 연속 상승세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7월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광주·전남 CCSI는 110.1로 전월(101.5) 대비 8.6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111.3)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광주·전남 CCSI는 지난 4

월(85.9)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구성지수 기여도도 모두 대폭 늘었다. 현재경기판단이 전월보다 2.5p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고, 현재생활형편(1.8p), 소비지출전망(1.3p), 향후경기전망(1.2p), 생활형편전망(1.0p), 가계수입전망(0.7p) 등도 모두 상승했다.

CCSI는 지난 20년간의 장기평균치를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지역민들이 지역 경기를 낙관적으로, 낮으면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광주·전남CCSI는 코로나19, 고물가 장기화, 국제정세 악화 등 잇따른 악재로 2021년 5월(102.8) 이후 4년동안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지난달 101.5를 기록하며 지역민의 경기 인식을 뒤집었다.

이어 이달에도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지역민들의 지역 경기에 대한 인식도 대폭 개선됐다. 이는 재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제 부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생성형 AI 활용 실무제작 워크숍

문화콘텐츠 종사자 50여명 참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2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실무제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광주 소재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AI 기반 콘텐츠 제작으로 주목받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진현주(하주) 작가가 맡았다. 강연은 참가자들이 직접 이미지 생성형 AI 툴인 ‘미드저니’, ‘런웨이’, ‘디자인’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AI 기반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뤄, 현업 종사자들이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저작권 문제 관련 이해도를 높였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 창작자들의 생성형 AI의 원리 및 활용법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창작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만기환급 약정 상조회사 절반 이상 자본잠식

“소비자 90%, 설명 제대로 못 들어”

만기 시 100% 환급해주는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결합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대부분은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당부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이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본래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탈회사 등에 지급된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소비자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에서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총 “도급 개념 모호...산업안전법 개정해야”

“의도치 않은 위반·형사책임 우려”

현행법상 도급 개념과 도급인(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발표한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도급과 발주의 구분이 어렵고 도급인의 책임 영역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공사발주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법상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고용부 지침에서 제시한 판단기준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문의 의미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라는 개념도 매우 모호하고 고용부 해설서 내용만으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도 현장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83.77	(+13.83)
▲ 코스닥	813.56	(+0.59)
↓ 금리(국고채 3년)	2.458	(-0.005)
↓ 환율(US D) 〈오후 5시 19분 기준〉	1378.25	(-9.55)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름용품 20%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시즌잡화 매장에서 고객이 밀짚모자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시즌 아이템을 선보인다. 시즌잡화 매장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의 우양산, 모자 등을 품목별로 최대 20% 할인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5월 출생아 수 광주·전남 전년 동월비 7.8%·5.0% 증가

혼인전수는 광주 늘고 전남 줄어

지난 5월 광주와 전남 모두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5월 출생아 수는 510명으로 전년 동월(473명) 대비 37명(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출생아 수도 662명에서 695명으로 33명(5.0%)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전남을 비롯한 12개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부산(-0.9%)과

대전(-0.7%) 등 5개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올 1~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로는 광주는 전년에 견줘 5.6% 오른 2676명, 전남은 7.0% 증가한 3647명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인 출생아 수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당시 혼인을 미뤘었던 신혼부부들이 엔데믹 직후 혼인하고, 출산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혼인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엇갈렸다. 광주시 5월 혼인 건 수는 570건으로 1년전(512건) 대비 11.3% 증가했지만, 전남은 1.4% 감소한 647건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는 올해 들어 혼인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1~5월 누적 기준 광주시 혼인 건 수는 전년 동기(2403건)보다 11.7% 많은 2683건이었다. 대전(26.3%)과 서울(15.3%)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전국 평균(6.7%)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광주·전남 혼인 건 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출생아 수 증가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보험금 선지급 나서

피해조사 속도 25일부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영농 재개를 위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금 선지급 조치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손해 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기준 집중호우 피해신고 2만 1877건 중 절반 이상인 1만 25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집중호우 전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미리 수립했으며,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을 배치했다. 이같은 사전 준비

를 통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과 농기계에 대한 피해 조사는 지난 22일 기준 전체 신고접수 건의 99%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손해 평가 결과를 신속하게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5일부터 피해 농가들의 보험금 지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농가의 빠른 회복을 목표로,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한 농가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